식품 안전 정보

위생 점검

1) 식약처,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2021-1-15, 썬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스키장 ·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 · 판매업체와 케이크 · 빵 등 식품 제조 · 판매업체 총 4,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음.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임.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 · 빵 등 조리 · 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으며,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 ·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 ·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음.

2) 경기도, 배달음식점 600여 곳 위생점검

(2021-1-27, 대한급식신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함.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임.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 · 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 · 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 · 거짓 표시 여부 등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 · 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 ·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 ·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임. 경기도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음.

3) 식약처, 설 앞두고 25~29일 성수 식품 위생관리 점검

(2021-1-20, 스카이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 위생 관리 점검이 실시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25~2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음.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 ·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 · 가공 · 수입업체 및 유통 · 조리 · 판매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됨.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 ·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임.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 · 작업 · 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음.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 · 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 · 검사를 실시함.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임.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선물 · 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8~27일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함.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 ·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 · 명태 · 양념육 등 농 · 축 · 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 ·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임.

2. 식품첨가물

1) '수입 규산마그네슘'이 식품첨가물로 둔갑, 업체 적발

(20201-2-23, 대한급식신문)

무단으로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3일 수입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음.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지난 '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 · 표시하는 등 총 3737kg(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음. 또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음.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음.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 · 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주의문구 표시해야

(2021-2-17, 식품저널)

앞으로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에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질산나트륨에도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음. 수산화암모늄 등의 식품첨가물에는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아질산나트륨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하도록 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를 강화하고, 현재 표시 ·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 · 규정했음. 개정안은 또, 표시 · 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 · 광고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8호, 2020.12.29.)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했음. 개정안은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3) 식약처,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 · 규격 신청 방법 제공

(2021-2-9, 농수축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등 제조업자가 한시적으로 기준 · 규격 신청 자료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준 · 규격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를 제작 · 배포함. 이번 안내서는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 기구 · 용기 · 포장 제조 영업자가 한시적 기준 · 규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음.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 · 규격 신청 방법 △인정 절차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독성시험자료 등 작성요령임. 식약처는 영업자가 식품첨가물 등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4) 온라인 유통 마른김에서 감미료 검출

(2021-2-26,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음.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음. 곱창돌김은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임.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임.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 · 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 ·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음.

5)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용으로 속여 판 방문판매업자 적발

(2020-12-08, 연합뉴스)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용으로, 밀수입한 진통제를 이른바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제조업자와 방문판매업자들이 적발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조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총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음.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10월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일부 식품첨가물을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약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이들이 회원들에게 판매한 식품첨가물은 거품제고용으로 쓰는 규소수지와 산도조절용으로 사용하는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등임. 현행법상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 가공 · 조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 쓰고, 직접 섭취해서는 안됨. 한 판매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음. 다른 판매자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영문명 TAWON LIAR)을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판 정황이 드

러났음.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진통제(멜록시캄) 성분이 검출돼, 이 허브 캡슐은 해외직구 위해 식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음.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는 게 목표임.

3. 원산지표시

1) 경기도, 식품위생법 ·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116곳 적발

(2021-2-26, 쿠키뉴스)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 판매 목적 보관 · 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보존 기준 · 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또한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2) 제주산 콩 사용한다더니 거짓...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9곳 적발

(2021-2-26, 헤드라인 제주)

제주산 콩을 사용한다고 안내해 놓고, 정작 제품은 국내산 또는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식당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은 도내 두부 제조업체 및 두부 요리 전문음식점 59개를 단속해 이 중 19곳을 두부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음.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속적인 콩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두부 요리 전문음식점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음. 단속한 업체 59개 중에서 식자재 유통업체 1곳과 두부요리 전문음식점 18곳을 두부류(콩)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했음. 이 중 3개 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또한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음. 식자재 유통업체의 경우 국내산 콩으로 만든 순두부 625톤 가량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후 납품시에는 '제주산+국산'콩으로 만들어 위장 판매했음. 외부 간판 및 메뉴판에는 '국내산 제주콩', '국내산 제주콩 100%', '국내산 콩 100%(제주산)' 라고 거짓으로 표시 하거나 간판 및 메뉴판에는 '국내산 제주콩 100%'라고 표시한 후 원산지 일괄표시판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해 혼동을 우려했음.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우려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원산지 표시가 돼있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음.

3) 건기식 해외 원산지 · OEM 표시, 다음달부터 의무화

(2021-2-15, 머니투데이)

다음달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생산 표시가 의무화됨

에 따라 소비자의 건기식 선택 정보가 넓어지게 됨.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음달 14일부터 건기식 표시기준 고시가 적용돼 해외에서 생산한 건기식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함께 위탁생산제품 여부를 제품에 표시해야 함. 이를테면 중국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은 '원산지 중국(위탁생산제품)' 형태의 표기를 해야 함. 식약처는 건기식 시장의 확대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9년 관련법을 개정했음. 식품과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위탁생산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새로 성장한 건기식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다만 식약처는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음. 건기식은 자가건강관리 열풍으로 2014년 1조6000억원대에서 지난해 5조원으로 급성장한 시장임. 홍삼류의 판매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의 인기가 높음. 경쟁도 치열해짐. 그동안 한국인삼공사와 제약업계가 주도하던 시장에 CJ제일제당, 이마트, 롯데쇼핑, 매일유업, 빙그레, 농심 등 식품 · 유통 대기업도 뛰어들었고 CJ제일제당의 경우 건기식 매출은 2019년 1000억원에서 지난해 2000억원으로 2배 성장했음. 건기식에도 원산지 표시와 위탁생산 여부를 표기하게 됨에 따라 TV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등의 채널에서 기업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원산지를 드러내지 않거나 위탁생산 여부를 밝히지 않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임. 업계에선 과거에 이런 사례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해외생산 표시 의무화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비타민류 건기식이 될 전망임. 영국이나 중국산 원료 수입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짐. 이외에는 국내 생산이 많아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나옴. OEM(주문자위탁생산)이나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경쟁력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까닭임. 식약처는 해외생산 표시 의무화로 식품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것으로 평가했음.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추진한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충분히 준비한만큼 시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4) 늘어나는 비대면 농식품 거래, 원산지 표시 철저하게 관리

(2021-2-8, 농기자재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 ·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함.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 우선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함. 또한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함.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 · 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

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음. 특히, 원산지 위반 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소비자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도 온라인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음.

4. 수입식품

1) 식약처, 코로나 시대 수입식품 위생 심사 강화... 비대면 현장실사 실시

(2021-2-19, 일요주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제조업소(수입식품 등의 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음. 최첨단 장비도 활용됨. 스마트글라스(영상송출을 위한 광학렌즈와 영상을 수신하는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영상송출 안경) 등을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해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심사자(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해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임. 수입현황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 · 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함. 식약처는 영업자의 자체 점검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한다는 방침임. 식약처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해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지난해 비대면 서류심사 결과 33개국 460곳을 심사해 위생관리 불량 1곳(수입중단), 제조공장이 아닌 업소 24곳(등록취소), 서류미제출 업소 76곳(검사강화)에 대해 조치했음.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2) 2020년 최다 수입 식품...김치 등 과채가공품 1위, 맥주 1위에서 3위로 하락

(2021-2-15, 메디컬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년 국내 수입된 가공식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입 식품은 과 · 채가공품, 김치, 맥주 등(정제, 가공용 식품원료 제외)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과 · 채가공품은 '19년 27만 5424톤에서 '20년 2.1% 증가한 28만 1222톤으로 3위에서 1위로 올랐음. 이는 지난해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타트 체리 및 석류, 당근 등을 원료로 한 과실 · 채소류 농축액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짐. 수입김치는 '19년까지 최근 3년간('17~19년) 연평균 5.5%씩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늘었으나, '20년에는 수입이 8.3% 감소한 28만 1021톤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위를 차지했음. 수입김치는 중국에서 99.9%수입되어 음식점(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주로 사용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단체급식 및 외식이 감소하면서 김치 수입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수입맥주는 '19년 36만 2027톤으로 수입실적이 1위지만 '20년에는 22.8%가 감소하여 3위로 내려갔는데, 이는 일본맥주 등 수입맥주 판매가 줄면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며 국산맥주가 일본맥주 등 수입맥주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는 주종의 다변화와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 술' 영향으로 와인 등 과실주 수입량이 '19년 5만 3231톤에서 '20년 6만 9413톤으로 3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상위 품목에 들지 않았지만 커피(음료, 조제커피 등)의 수입량은 '19년 2만 3845톤, '20년 2만 4265톤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수입량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커피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 시 원료로 사용되는 '커피 원두'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5.5% 증)한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수입국으로는 브라질산이 21.3%, 베트남산 19.6%, 콜롬비아산 18.2% 에티오피아 7.7%, 페루 5.6% 순으로 집계 되었음.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다양한 동향 분석을 통해 수입 증가 품목은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정보를 제공 한편, 국내외 위해정보에 신속 대응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3) 식약처, 수입식품 시험 분석 全과정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2021-2-23, 데일리메디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월부터 수입식품 검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입자가 검사 종료 시점을 가늠해 제품출고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입검사 진행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함. 이번 알림서비스는 작년 9월에 개최했던 '수입식품 정보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것으로, 기존에는 수입자가 시험분석 진행과정을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험분석 검체수거 ▲분석시작 ▲분석종료 등 검사 진행상황을 문자로 제공받음. 식약처는 수입자용 '수입식품 알리미 모바일 앱'을 올해 10월까지 개발하여 검사 알림 이외에 수입 영업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임. 수입자에게 식약처가 보유한 해외 위해식품 수집정보, 수입식품 부적합정보 등을 알리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문제 식품 수입으로 인한 수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적으로는 해외 위해식품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민원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4) 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 수입한 '녹두' 농약 기준 초과... 판매중단 · 회수

(2021-2-26, 푸드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서 수입한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kg)를 초과 검출(0.04㎎/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음.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임.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 · 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음.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음.

5. 식중독사고

1) 지난해 학교 · 유치원서 식중독 22건…"새 학기 급식관리 주의"

(2021-2-24, 연합뉴스)

식품 보건당국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각별

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음.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학교와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연평균 건수는 각각 29건, 7건으로 총 36건에 달했음. 지난해 학교에서는 총 16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총 448명이 치료를 받았다. 유치원에서도 6건의 식중독이 확인돼 194명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됐음. 최근 5년간 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시기를 보면 3~11월까지만 많은 편이었음. 학교에서는 3월에만 총 18건이 발생했는데 특히 여름철인 6~8월에 들어서는 30건→10건→31건 등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11월에 총 10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에 나섬. 초 · 중 · 고등학교 내 급식소 6천곳, 유치원 급식소 2천곳, 업체 1천곳 등 총 9천여곳이 대상임. 식약처는 각 급식소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는지, 식자재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급식 시설 및 기구 세척 · 소독 관리가 잘 되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임. 아울러 급식용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식자재를 수거해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 여부를 검사할 계획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확인함. 식약처는 급식 전 과정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생 관리를 당부했음. 방학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이나 기구는 반드시 세척,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함. 바닥에 균열이 생겼거나 일부 파손됐다면 즉시 보수해서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칼이나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하는 게 좋고, 조리 시설→기구 등은 세제로 먼저 세척한 뒤 염소 농도가 200ppm 이하인 차아염소산나트륨 액 등으로 소독하는 게 바람직함. 음식 재료를 살 때는 유통기한이나 상태를 꼼꼼히 따지고 냉장 · 냉동 보관법을 준수해야 함. 육류는 중심 온도가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인 조건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조리하도록 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음.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온장고 등에서 60도 이상으로,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냉장고 등에서 5도 이하로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됨. 조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권고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급식소 조리 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2) 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 식중독 환자 '뚝'…집계 이래 최저치

(2021-2-7, 연합뉴스)

지난해 식중독 발생과 환자가 2000년대 초 집계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강화되고, 집단 식중독 사고가 주로 발생했던 학교 · 식당 등이 문을 닫은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78건, 환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53명으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음.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식중독 발생 건수는 52%, 환자 수는 40%로 각각 줄었음. 유형별로 보면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환자 수가 지난 5년간 연평균 2천304명에서 지난해 448명으로 급감했음.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출석 일수와 급식 인원이 줄면서 개학철이나 하절기에 집중되던 식중독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음. 지난해 가장 많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이었지만, 전반적인 감소에 힘입어 지난 5년 평균 210건에서 절반인 103건으로 줄었음. '기타 발생장소'에서의 식중독 발생 건수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했음. 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식당이 문을 닫고,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식중독 사고도 같이 줄어든 것임.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3~5월과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8~9월에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음. 식약처는 "3~5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해지면서 식중독 발

생도 따라 줄었음. 또 6월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과태료 강화 등의 조치로 8~9월 발생 건수가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원인균별로 살펴보면 단체 급식 사고의 주원인이었던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최근 5년 연평균 44건, 환자 수 2천97명에서 지난해 15건, 532명으로 크게 줄었음. 오염된 생굴이나 지하수 등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도 5년 평균 52건, 환자 수 1천115명에서 지난해 26건, 239명으로 감소했음. 식약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실천이 강화되면서 역대 최저 식중독 발생 기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인위생은 물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교육 ·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6. 건강기능식품

1) '파이' 커진 건강기능식품 시장… 소비자 마음 훔쳐라 (2021-2-24, 스포츠동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건강관리와 면역력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층이 젊은 세대로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임.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음. 웰빙 트렌드는 한층 더 확산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더욱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전망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5조 원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됨.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확한 시장 분석을 위해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 매년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5년 간의 조사 데이터로 파악한 2020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6% 성장한 4조9805억 원으로 나타났음. 실질적인 시장 성장을 의미하는 소비자 구매 행동지표도 모두 상승했음.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률은 2020년 78.9%로, 5년 전인 2016년(65.3%)에 비해 13.6%p나 늘었음. 업계에서는 올해 가장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꼽았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유통하는 240개 회원사의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4.2%(복수응답)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인기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답했음. 이어 단백질 보충제(38.7%), 종합 및 단일 비타민(32.3%), 체지방 감소제품(21%), 홍삼(14.5%), 기타(14.5%), 오메가-3(12.9%) 순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2017년 전후로 주목받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홍삼(28.8%)에 이어 시장규모 2위(17.8%)를 기록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리딩하는 원료로 부상했음.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고 종합비타민(8.6%), 단일비타민(5.1%), EPA 및 DNA 함유 유지(4.2%), 체지방 감소제품(3.0%) 등이 뒤를 이었음. 전 연령대에 걸쳐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보편화되면서 업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음.

2) 지난해 가장 많이 찾은 수입 건강기능식품 1위 복합 비타민 (2021-2-5, 서울경제)

지난해 가장 많이 찾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된 복합 영양소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제품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을 분석한 결과, 복합 영양소 제품이 지난해 전체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의 17.7%(3,509톤(t))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2위는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등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락토올리고당(3,228t), 3위는 혈액 순환이나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EPA · DHA 함유 유지 제품(1,984t)이었음. 4위는 영양소 · 기능성 복합제품(1,648t), 5위는

단백질(1,337t) 제품임. 식약처는 “특히 영양소 · 기능성 복합제품은 직전 해 대비 수입량이 296%나 늘어나는 등,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단일 성분보다는 복합 영양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음.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1.4%씩 증가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33.8%를 차지했음. 다만 지난해 ‘타트 체리’와 ‘크릴 오일’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하다 허위 · 과대 광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영양 · 기능성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음. 또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제품은 제조 · 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금지된 약 성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한글 표시사항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것을 식약처는 권고했음.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 회수 · 판매중지된 수입 식품 등을 확인할 수 있음.

7. 유해물질&잔류농약

1) ‘설 성수식품’ 853건 유해물질 안전성 99% ‘안전’ (2021-2-27, 에코저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성수식품’ 853건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음. 이번 조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 수원 · 구리 · 안양 · 안산 농수산물검사소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음. 경기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한과(떡)류, 식용유지류, 농 ·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일제 조사가 진행됐음.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가공식품 311건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식중독균 포함 여부와 제품 규격미달 여부를, 수원 · 구리 · 안양 · 안산 농수산물검사소는 농 · 수산물 등 54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항생물질, 방사능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음. 조사 결과 850건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가공물 벌꿀 2건이 ‘전화당 기준 미달’, 수산물 조피볼락 1건이 ‘항생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명됐음. 벌꿀 2건에서는 벌꿀 진위판별의 평가항목인 ‘전화당’이 각각 기준 60% 이상에 못 미치는 57.2%, 55.4%로 조사됐음. 조피볼락에서는 항생물질인 ‘트리메토프림(trimethoprim)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음.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에 대해 제조업소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압류 · 폐기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음.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6% 이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2) 식용유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1-1-18, 키즈맘)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및 판매 중인 식용유 30개를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지방산 에스터(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임. 유럽연합은 국제기구 및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안전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함.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모니터링하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음. 하지만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되어 수입원료 관리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음.

3) 美 대형 이유식 제품서 납 · 비소 등 유해물질 다량검출 (2021-2-5, 뉴스1)

미국의 대형 이유식 기업 4곳에서 판매하는 이유식에 납, 비소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음. CNN은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경제소비정책 소위원회가 진행한 조사 결과 시중 판매되는 이유식 제품에서 납 · 비소 · 수은 ·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으며 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다고 보도했음. 조사를 이끈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 · 일리노이) 미국 하원의원은 "비소, 납, 카드뮴, 수은과 같은 독성 물질이 전문가와 정부 기관의 허용치 이상 위험한 수준으로 이유식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CNN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정한 기준치는 없지만 유아들의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에 든 독성 물질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음. 비영리 단체 '건강한 아기 밝은 미래'의 제인 훌리헌 대표는 "아기들의 두뇌는 빠른 속도로 형성된다"며 "중금속에 노출될 경우 행동 장애와 공격성, IQ 저하, 인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음. '건강한 아기 밝은 미래'는 2019년 시중 판매되는 이유식의 95%에서 납, 비소, 수은,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음.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2년 전 이 보고서에서 영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음. CNN에 따르면 미국 이유식 업체 '거버', '비치넛 뉴트리션', '너처', '하인 셀레셜'의 내부 조사 결과 시판 생수에 허용되는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최대 91배, 납은 최대 177배까지 많이 함유된 제품도 있었음. 수은과 카드뮴은 각각 최대 5배, 69배까지 더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거버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물질은 "(재료로 사용되는) 농작물이 자라는 토양과 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4) 이물질 · 질식 위험 수입품 153개, 국내서 유통… 전년대비 11.7%↑ (2021-2-25, 뉴스1)

이물질과 질식 위험 등으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153개가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음. 음식이나 식료품이 가장 많았고 아동용품과 유아용품이 그 뒤를 이었음.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5일 밝혔음. 이는 전년 137개 대비 16개(11.7%)가 더 늘어난 것임. 소비자원은 이중 국내에 공식 수입 · 유통업자가 없거나 이들이 판매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판매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해 판매를 차단했음. 나머지 5개 제품은 환급 · 무상수리 등을 권고해 조치가 이루어졌음. 품목별로는 음 · 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 · 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음. 리콜 사유로 음 · 식료품은 이물 혼입(9개)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가 가장 많았음. 특히 과자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이물이 들어가거나 색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음. 아동 · 유아용품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이를 영유아 ·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18개로 절반 이상이었음. 이렇게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던 아동 · 유아용품으로는 봉제인형이 6개로 가장 많았음. 화장품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6개)해 주로 리콜됐음. 특히 미백 크림 7개와 바디로션 3개 제품이 수은 · 하이드로퀴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리콜됐음. 에센셜오일 6개 제품은 모두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해 리콜됐음.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제품은 모두 80개로 중국산이 33개(41.3%)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29개(36.3%)로 그 뒤를 이었음. 가전 · 전자 · 통신기기는 모두 중국산이었고, 아동 · 유아용품은 역시 15개 중 11개(73.3%)가 중국 제품이었음. 생활 · 자동차용품은 15개 중 10개(66.6%), 화장품은 15개

중 9개(60.0%)가 미국산으로 가장 많았음.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판매차단한 제품 119개 제품 중 44개(37.0%)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총 66건을 판매차단 권고했음.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 · 판매되므로 이미 판매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소비자원은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등 재유통 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위해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과 리콜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 실정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 환경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국가기술표준원 · 소비자원 등 6개 부처와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기관들과 중대 위해 제품에 대한 합동 감시 · 공동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 협력할 예정임.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 리콜된 제품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음. 소비자원은 27개 기관을 통해 39개국의 해외리콜제품 정보를 수집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음. 리콜제품 정보는 '해외리콜 수집정보' 게시판에서, 국내 유통이 확인돼 조치한 결과는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8. 기타

1) 농식품 수출하려면…식품안전규정 확인은 필수 (2021-2-25, 데일리안)

앞으로는 오징어 분말이 4%가량 함유된 라면스프가 전체 라면중량의 0.5%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오징어 분말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유럽연합(EU)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 길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올해부터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식품안전규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식품수출업체들의 사전준비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임. 변경사항에 따르면,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유래가공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EU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임. 기존 복합제품이 생산되는 작업장은 EU 승인 없이 자국 담당관청에 이미 등록된 작업장이면 상관없음. EU의 정의로는 복합식품은 육류나 동물부산물(뼈 · 내장 · 지방 등), 수산물, 동물유성분(우유), 알, 꿀 등의 동물유래가공식품과 채소, 식물성 제품을 혼합한 제품을 의미함.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개정안 적용품목과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을 확인해야 하고, 개정안의 수입요건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적용품목은 HS코드 상 총 14개 품목임. 생선어묵 · 라면 · 냉동만두 · 김치 · 간장 · 고추장 · 스프와 육수류 · 아이스크림 · 두부 · 김 등이 있음. 전 세계 최고의 품질과 식품안전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EU로서는 나라간의 수출입이 활발해지고 교역이 늘어남에 따른 식품안전 대비책으로 풀이됨. EU로의 국내 농식품 수출은 김치 · 소스류 · 라면 등의 수출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약 5억5400만 달러를 기록했음. 특히 라면은 신제품 출시와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5700만 달러를 수출, 직전년도 대비 48% 증가 등 가공식품 수출이 해마다 늘고 있음. 이에 정부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신규 규정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제품을 위한 대응에 나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3일 국내 주요 수출업체와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EU의 복합식품수입규정에 대한 현지전문가 초청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음. 웨비나에서는 EU 집행위원회 보건안전식품총국 파울로 카리카토(Paolo CARICATO) 정책담당관이 신규 규정의 주요내용과 EU의 향후 관리계획에 관해 설명했고, 프랑스 현지법률기관 소속 소피 모랑(Sophie MORIN) 변호사는 신규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수출제품의 수출 가능여부와 유의사항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소개했음. 또한 국내 조개류 생산 해역에 대한 위생 · 안전관리도 강화했음. 조개류 생산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도 마련 중임. 굴

이나 조개류는 일정한 곳에 정착해 서식하고 식중독균 등을 체내에 농축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임.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항생물질 ·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용 중임. 이와 함께 정부는 한 · 중 · 일 3국간에도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원 아시아(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도 추진함. 아시아권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시장 규모가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하지만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3국이 함께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해 식품안전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킨다는 방침임. 이번 EU를 겨냥해 만든 aT 웨비나 영상은 aT 유튜브채널(aTweb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며, 제도변경과 관련된 품목별 세부 대응 지침은 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임. 아울러 aT는 국내 농식품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자무역 특화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도 손을 잡았음. 양 기관은 24일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이번 협약을 통해 aT가 디지털 기반의 수출농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농집(NongZip, 수출농가 지원플랫폼)과 KTNET의 농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Agri의 데이터 연계로 수출지원 서비스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임. 농가는 농집에 입력한 자료가 그대로 원산지 증빙 자료로 제공돼 서류제출 등의 수고를 덜 수 있고, 농식품 수출업체는 FTA Agri에서 원산지증명서와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해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됨.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무역 · 물류 문서 활용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해 수출농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임.

정리: 한인화(광주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